

【 해외금융 뉴스: 일본 】

금융시장 안정화와 피해복구를 위한 대안 마련

- 일본정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규모가 15조~25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피해복구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 등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추진 중임.
 - 적절한 피해복구와 관련하여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대지진 및 원전사고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경우 일본경제에 부정적인 영향과 함께 소비심리도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함.
 - 또한 무디스는 대지진사태로 금융부문 등 경제전반의 위험성이 높아졌으며, 특히 약 1조엔 규모의 지진보험금 지급이 일본 손해보험회사들의 손익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 손보 대형3사의 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조정함.

- 한편 일본은행은 대지진으로 인한 금융시장 안정화를 위해 지난 14일부터 총 100조엔의 긴급자금을 투입한 이후 23일 처음으로 유동성 자금공급을 중단함.
 - 대지진의 영향으로 엔고 및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은행은 막대한 단기성 자금을 투입하였으나, 긴급자금을 투입한지 10여일 지나 자금공급을 중단
 - 일본은행이 유동성을 중단한 것은 시장에 금융기관들이 필요로 하는 유동성이 충분하여 어느정도 금융시장의 안정세 징후가 확보 되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며, 엔고 저지를 위한 G7의 공동 개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인 것으로 해석됨.

- 일본정부는 피해복구 재원조달을 위해 10조엔 규모의 부흥국채 발행과 무료복지 계획의 백지화 검토, 피해자 세제혜택 지원방침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마련함.
 -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흥국채를 발행하여 일본은행이 전액인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, 또한 그동안 정부여당이 적극적이었던 아동수당과 고교무상화, 고속도로 무료화 등의 예산안을 재검토하여 피해복구 예산으로의 전환을 적극 고려
 - 또한, 일본정부는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기업 등의 조기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 등이 주택을 신축할 경우 취득세 등의 부동산세 감면과 법인에게는 법인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긴급 세제감면대책을 발표함.

(산케이신문 3/18, 요미우리신문 3/23, 아사히신문, 3/22 종합)